



의안번호

제56호

지 방 세 감 면 동 의 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2. 4. 13.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제56호
----------	------

제출연월일 : 2022. 4. 1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영세기업,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감면대상 해당 여부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 2020. 03. 09.)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2020030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

2. 주요내용

□ 주민세(시민 및 소상공인·영세기업) 감면

○ (감면대상) 우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 5만원

○ (감면시기) 2022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 (감면방법) 별도신청없이 일괄감면

○ (감면예상액)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감면예상액: 약 1,007백만원

세 목		적용대상	감면세액	22년 감면예상액		비고
				건수	금액(천원)	
계				58,786	1,007,006	
주민세(개인분)		개인세대주 전부	1만1천원	50,596	556,556	21년도 감면액 기준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세액 5만5천원이하 영 세 사 업 자	5만5천원	5,670	311,850	
	법인사업자			2,520	138,600	

※ 감면세액 및 감면예상액은 지방교육세(본세의 10%) 포함 금액임

□ 재산세(착한임대인) 감면

- (개념)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 (감면대상)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시설의 소유자
 -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착한 임대인)로 2022.1월~12월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감면시기) 2022년 7월 재산세(건축물), 9월 재산세(토지)
- (감면방법) 착한임대인이 감면신청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
- (적용요령)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을 적용

감면요건(안)	감면율	비고
임대료 인하율이 50% 이상 일 때	50%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 50% 미만 일 때	인하율 만큼	

- (감면예상액) 재산세(건축물, 토지) 감면예상액: 약 7백만원

세목	‘22년 감면예상액		비고
	건 수	금 액(천원)	
계	47	6,998	‘21년도 감면신청 기준
재산세(건축물, 토지)	47	6,998	

3. 지방세 감면에 따른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 및 소상공인·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
- 지역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원하고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 촉진을 위한 지속적 참여 확산에 기여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세 무 과 장	임 성 영
	지 방 소 득 세 팀 장	김 종 현 (746-5441)